

‘화정 아이파크’ 붕괴 201동 전면 철거 후 공원 검토

현대산업개발, 유족측과 보상 합의... 후속 조치 속도

유족 측 제안에 긍정적 입장... 입주 예정자 동의 남아 인근 상가피해자 협의·7개 동 처리 등 해결과제 ‘산적’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의 피해자 유가족들이 HDC현대산업개발측과 합의를 마무리함에 따라 붕괴사고 현장에 대한 후속 조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붕괴된 201동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진행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희생자 가족협의회는 붕괴사고 인근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현대산업개발 측과 합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난 8일 6명의 피해자가 모두 수습된 지 12일만이다. 정몽규 전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직접 피해자들과 만나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현대산업개발 측은 가장 큰 산을 넘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아직도 현대산업개발측이 해결

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향후 ▲인근 상가피해자들과의 협의 ▲입주예정자들과의 협의 등이 남았고, 이후 붕괴된 건물에 대한 철거도 201동의 부분 철거 또는 전면 철거 여부와 이미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나머지 7개 동에 대한 처리 여부도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201동에 대해서는 전면 철거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201동 건물을 전면 철거한 뒤 그 자리에 공원을 꾸미는 방안이 제시됐고, 현대산업개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는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며, 재발방지가 우선이라는 점에서 현대산업개발에 기회를 준다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했다는 입장이다.

사고 현장이 반목과 대립 그리고 싸움터가 아닌 상생으로 거듭나서 다시 재건되는 현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가족협의회회 생각이다.

이를 위해 피해자가족들은 현대산업개발측과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지지지는 않았지만 상생협의체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다시는 사소한 사고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고 현장이 안전한 현장의 모델로 거듭나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피해자협의회회 복안이다. 이를 위해 상생협의체에 자치구와 광주시도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로써 22일 현장인근에 차려졌던 합동분향소는 종료되고, 피해자들의 장례 절차에 들어간다. 희생자 6명 가운데 광주에 연고를 둔 4명은 광주시 서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오는 25일부터 빈소가 마련된다.

한편, 이날까지 합동분향소에 추모를 위해 이어진 발길은 총 907명이었다.

안정호 가족협의회 대표는 “정몽규 전 회장을 비롯한 현대산업개발의 사에서 진성성이 보여 용서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어떤 재판 현장에서도 우리가 족들의 사례가 널리 퍼져 다들 뚫뚫 뚫쳐서 상황을 이겨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붕괴 원인 ‘콘크리트 지지대’ 위법이다 vs 아니다

광주 경찰, 책임자 처벌 수위 고민... 국토부 답변 기다려

광주 경찰이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책임자 처벌 수위를 놓고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입장을 받지 못하면서 고민하고 있다.

붕괴사고 범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한국건설품질연구원 관계자의 전문 내용을 토대로 붕괴원인을 추정하면서도 정작 위법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면서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2일 수사 브리핑을 갖고 38층 위 PIT층 하중을 떠받치기 위해 설치한 7개의 콘크리트 담 형태의 지지대가 오히려 하중을 지지대로 모으는 역할을 하면서 아랫층 슬래브를 무너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의 위법성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PIT층은 주로 건물 최고층에 건물에 소요되는 배관 등 각종 설비를 모아두는 층으로, 보통 아파트 층고의 절반 정도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자문위원인 이성민 한국건설품질연구원 부원장은 ‘PIT층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한 수심 t에 이르는 콘크리트 담 형태의 지지대에 하중이 몰리면서 아래층을 무너트린 것’이라는 취지의 자문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공사 관계자들이 하중을 버텨줄 것으로 기대하고 설치했던 콘크리트 지지대가 오히려 건물을 무너뜨리는 ‘독’으로 작용했다는 얘기다.

경찰은 이 때문에 콘크리트 지지대가 애초 설계와 달리 설치됐다는 점에 주목, 관할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이뤄지는 ‘설계변경’인지,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조정이 가능한 ‘공법변경’인지를 국토부에 질의한 상태다.

만약 국토부가 콘크리트 담 형태의 지지대 설치 구조를 안전진단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공사로 판단할 경우 처벌 수위는 경찰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도 엿보인다.

경찰은 일단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설치해야 할 지지대(동바리) 철거의 경우 위법한 사실을 확인한 상태로, 원정사 관계자들의 시공 과정에서인지 여부도 수사중이다.

경찰은 또 아파트 콘크리트 타설을 맡은 업체의 불법 하도급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현대산업개발과 콘크리트 타설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다른 펌프차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는데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상태로 계약이 이뤄진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7명, 감리 3명, 하청업체 관계자 4명, 펌프차 업체와 업체관계자 1명 등 총 16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당당한 청춘, 꽃길만 걸어도

22일 오전 동신대학교에서 비대면 학위수여식을 마친 졸업생들이 학내에 설치된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자산 매각 불복’ 미쓰비시 항고 잇따라 기각

미쓰비시중공업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채권 확보가 한 발 더 진척됐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 매각명령 불복 항고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와의 4부는 최근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93)·김성주(93) 할머니에 대한 상표권(2건)·특허권(2건) 특별현금화(매각) 명령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측의 즉시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전지법은 기각결정 정본을 공식송달하며 “항고인인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받아가라”고 안내했다. 공식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실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9월 27일 대전지법 민사28단독 재판부는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의 5억여원 상당 채권(상표권·특허권)을 매각할 것을 주문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지난해 9월 1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약 대법관)가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였다. 구체적인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양금덕 할머니 채권)과 특허권 2건(김성주 할머니 채권)이다.

매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액수는 1명당 2억 970만원(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상당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와 관련해 국내에서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게 처음이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미쓰비시 측은 피해자 2명분의 5억여원 상당 특허권·상표권을 현금화해야 한다. 다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대선 후보들에 5·18 국가 정책 제안

오월단체 ‘5·18 정신 헌법 전문 반영’ 등 7개 항목

오월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에게 5·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 정책을 제안했다.

22일 5·18기념재단과 오월 3단체는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하는 정책안을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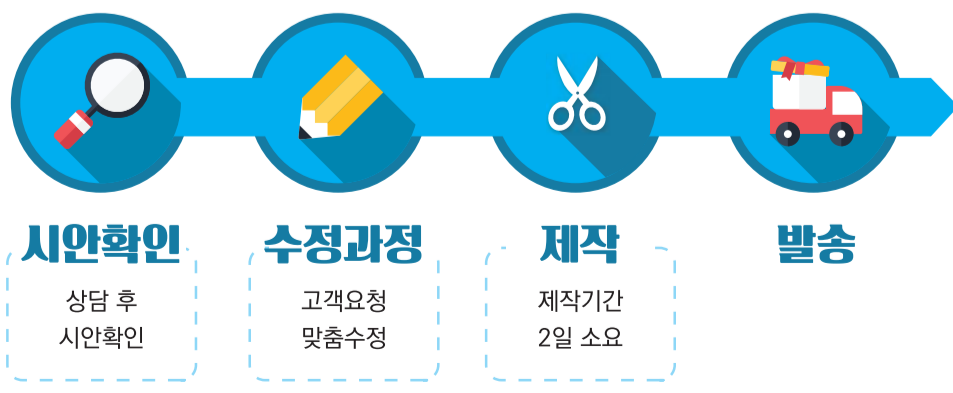
정책안에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진상규명 협력 및 5·18정신의 세계화와 미래로의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 ▲광주교도소 옛터의 민주인권공과 조성 지원 ▲5·18민주인권 기념 조성 및 제도적 뒷받침 ▲5·18민주유공자의 정신적 피해보상 지원 ▲5·18국가기록원 설립 ▲5·18정신 세계화를 위한 기념재단 지원 등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분수령이었으며 더 나은 민주주의의 소중한 정신적 자산으로서 세계인들에게도 그 의미와 가치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선후보들에게 정책으로 구체화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훈 유족회장은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년이 훌쩍 넘었지만 피해자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대통령 후보들이 우리의 정책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각 당의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되고, 나아가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 정책으로 구체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천년이 지나도 변치않는 ‘오석(烏石)’ 에 사진을 새기다



제이와이 석재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

- <주 사용처>
- 문패, 준공성, 식수석, 묘지용 와비, 남골당 수목장 표시석, 인테리어 돌액자
- 주요제작사이즈 -
1. 100×200×20
 2. 200×200×20
 3. 300×200×50
 4. 400×300×20 (가로×세로×높이)
- 기타사이즈는 문의